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

권혁희*

- I. 서론
- II.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
- III.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의 범제화와 정책적 특성
- IV. 결론

국문요약

그동안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역사 유적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인 비물질 문화유산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선명화된 이후 민속명절 복원과 같은 진흥정책이 확산되었으며, 2012년에는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법률을 만들어 일부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북한체제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최근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수가 두드러지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식문화가 사회주의 문화

에서 배척할만한 계급적 의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인민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비물질문화유산에 관심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행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북한 사람들이 형성해온 문화 그 자체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물질문화유산, 문화유산정책, 조선민족제일주의, 음식문화, 고난의 행군, 세계무형문화유산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I. 서론

최근 북한에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과 정책의 수립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일컫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국가단위 문화유산의 지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까지 등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유적이거나 유물, 건축물과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과 대비되어 한국인의 문화적 관습과 생활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남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 혹은 무형문화재로 지칭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과 김치만들기가 있으며, 2018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씨름이 있다. 그 외에도 비물질문화유산에는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레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등이 망라되어 있어,¹ 비교적 넓은 범위의 문화유산 개념을 법제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 등 유형문화재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강했다. 관련 연구에서도 대부분 북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특성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1994)이나 문화유산법(2012)의 해설 등 법제와 행정에 국한된 방식의 선행연구가 다수였다.² 일부는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비교하거나 남북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을 자세히 소개하고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등³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법제도와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국한되거

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약칭: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시행 2015.6.10.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제2조,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 Article.do](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4.15.).

² 관련된 연구로는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호 (2003), pp. 39~67; 정철현,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37집 제2호 (2006);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 pp. 223~251;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2017), pp. 91~113 등이다.

³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 pp. 139~147;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 86~91;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pp. 106~110.

나 남북교류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2012년이 아닌 정권 수립 이후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후 1986년 이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거쳐 체계화되고 제도로서 정착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통치전략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정교화되어갔는지를 1980년대 후반 민속명절 복원이나 ‘민족료리’ 개발 그리고 민속놀이 진흥에 이르는 전통문화의 창출과정과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법률 제정과 연결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이 차지하는 의미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 그에 따른 정책적 실천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이 음식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이 김정은 시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정책화시키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그 동안 남북 문화재 관련 교류가 역사 유적과 고고학 발굴과 같은 유형문화재에 치중되었던 것에 벗어나 북한의 생활문화나 무형문화재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

1.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시 중심의 정책(1947~1980년대 중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남한의 문화재 보호법과 비교하거나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의 변동을 다루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관련된 문화유산 역시 유적 중심의 문화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47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이나 민족체육(민속놀이) 같은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정권 초기 유적이거나 유물 등과 같은 물질문화관련 정책들 속에서 비물질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방해왔다. 먼저 북한은 1948년 내각결정 제 58호를 통해 기존 북조선 중앙고적보존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라는 내각

직속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속유물의 조사발굴과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학부를 조직했으며, 1950년대 중엽 이후에는 사회과학원 내 고고 및 민속 연구소와 조선민속박물관이 만들어져 현지조사와 같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⁴ 따라서 이 시기 비물질문화에 대한 정책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정보다는 사회과학원 내 민속학 연구소 중심의 현지연구와 민속놀이와 같은 과거 전승 문화 중 사회주의 문화에 맞는 것을 진흥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후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하는 시점인 1967년부터는 사회주의에 맞는 역사성과 계급성을 반영하는 논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조가 선명하게 반영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박물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요구에 맞게 전시체계를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나타난다.⁵ 이와 같이 주체사상 확립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북한정권의 인식은 1971년 홍기문이 『조선문학』에 게재했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글에 의하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문화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복무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 것만큼 그 계승발전에서 비판적 태도 즉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⁶

여기서 ‘계급적 립장’을 유적과 유물과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에 적용시키게 되면, 과거 유산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호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내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봉건잔재의 청산에 대한 해석에서 유적과 유물은 다소 중립적이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민족적 감수성을 더할 수 있는 여지를 강하게 함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화유산이 사회주의 현실에서 체제유지와 동떨어져 있던 반면 비물질문화유산은 봉건잔재로서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대립되는 요소들이 상존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맞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물질문화유산과 달리 문화적 관습이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

⁴ 본사기자, “민속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7년 4호 (2007), pp. 3~4.

⁵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 154~155.

⁶ 홍기문,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조선문학』 1971년 제5호 (1971), p. 11.

승문화와 같은 비물질문화유산은 조금 더 복잡한 해석의 문제를 담지하고 있었다. 가령, 1970년대 초 “민간명절행사에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과 함께 얽혀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가려내어 이를 오늘의 근로자들의 구미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⁷ 설명과 같이 전통 명절과 민간전승 놀이나 세시풍속 등은 그대로의 전승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변용의 요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⁸

한편, 이러한 지배체제의 확립과 문화유산정책과의 관계가 함축적인 교시가 아닌 좀 더 체계화된 정책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976년이다. 1976년 주체사상의 확산 속에서 북한의 정무원이 「역사적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 규정에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하여 놓은 원시유적, 옛성, 옛 건물과 건물터, 옛 무덤, 옛 비석, 옛 건축물, 생산도구 및 생활도구, 옛날의 무기와 조형예술품, 민속자료, 민족고전 등”을 보존하고, “복고주의적 경향과 민족허무주의를 없애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밝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⁹ 이 원칙은 19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없이 수용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배격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과거 그 자체로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화에 맞게 변용시켜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기존에 견지했던 강한 계급성의 원칙에 민족의 개념이 점차 문화유산에도 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치적 충격과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 이전까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비물질문화유산은 보존이나 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봉건시대 문화를 사회주의적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창출시켜야 하는 과업이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주로 민속놀이나 연희, 연극, 무용 등의 분야로 집중되어 나타났다.¹⁰ 비록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물질문화와 대비되어 독립적

⁷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명절행사,” 『고고민속논문집』, 1973년 5집;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pp. 447~448에서 재인용.

⁸ 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확산기 비물질분야인 민속관련 연구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요는 노동 계층에서 전승해온 강한 계급성을 담지하고 있는 장르였다는 점과 대중 선동이나 노동력 강화에 필요한 예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근, “북한의 민속전통 계승의 실제와 의미,” 『동방학』, 제22집 (2012), p. 100 참고.

⁹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6년 제3호 (2006), pp. 8~9.

¹⁰ 가령, 1964년에 발간된 『조선의 민속놀이』의 서문에 의하면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

인 개념으로 정책화되지는 못했지만, 문예와 민족체육, 민속놀이 등의 카테고리로 분산되어 복고주의를 배격하고 계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족허무주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민족주의의 추구가 아닌 그에 대한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정도의 정책은 주체사상 시기 북한정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인 민족주의의 재현과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하는 정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시대에 이르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2.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책화와 비물질문화유산(1980년대 후반~2012년)

196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문화유산에서 전통명절이나 의식주, 생업기술, 전통의료, 사회적 관습과 같은 생활문화 전반은 특별히 언급되는 영역이 아니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이러한 영역의 활성화는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주창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체제위기 속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불러넣었다. 사회 전면에서 나타났던 전통의 창출을 통해 명절의 부활과 전통 옷과 음식, 역사적 유적이 복원되는 등 민족을 우위에 둔 새로운 지배담론의 강화가 전면화된다. 추석이 가장 먼저 부활되었으며,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 한식이 부활되어 4대 명절로 지정되기에 이른다.¹¹ 이후 한식과 단오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민족 고유성을 갖지 못한 명절로 이후에는 제외되고 청명과 정월대보름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1990년대 초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의 선명화로 나타나는데, 가령, 김일성은 1991년 8월 담화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해 “협소한 리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 리익을 민족적 리익 위에 올려 세우거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¹²을 강조한 것은 오랫동안 계급이 차지했던 지배담론을 민족으로 교체하는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이어 추진된 단군릉과 동명왕릉의 발굴과 복원은 평양중심의 역사관과 민족주의를 실증해주는 대상으로 국

서 한 보고에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한 것을 토대로 인민성이 뛰어난 ‘씨름’, ‘그네뛰기’와 같은 민속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서울: 푸른숲, 1989). 참고.

¹¹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403호, 1998.10.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379호, 1998.4.22.

¹²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법범민족련합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91).

가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서 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즉 과거 역사를 재창출하는 수준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평양을 민족의 수도로 하는 정책은 전면적인 과거의 문화적 관습들을 재평가하는 작업과 병행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1994년 법제화된 북한 최초의 문화유산보호 법률이 탄생되는 배경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단계까지는 비물질문화유산에 해당되는 분야가 법률 속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4대 전통명절의 복원과 이로 인한 전반적인 조상의례의 허용, 명절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와 전래음식의 장려 등 활발한 전통의 창출이 점차 전개되어가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은 명절의 지정과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방향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혹독한 사회변화 곧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 더욱 더 강화된 논조와 구체적인 정책과 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사회를 단속하고 민족적 일체성을 자각시키기 위해 비물질적 요소 혹은 문화적 관습과 고유 전승문화에 대한 진흥정책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전통명절에 대한 공식화 속에서 조상의례는 물론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문화에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조상전래의 풍속과 레의도덕’ 그리고 ‘민족옷을 입는 것도 장려’하고 ‘민속명절과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우리식의 음력설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 수리날과 한가위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고, 씨름 옷놀이, 그네뛰기 연뛰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즐기도록”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지역과 직장 단위 전반에 일어났다.¹⁴ 일년 내내 세시풍속에 맞는 민속놀이와 조선 고유의 옷차림과 민족요리 등을 복원시키는 전면적인 민속의 창출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다”¹⁵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복과 음식에서도 조상전래의 방식을 개발하여 보급시키는 등 전통의 활용과 일상생활에의

¹³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 176.

¹⁴ 김광진, “백두산 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3년 2호 (2003), p. 10.

¹⁵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p. 220~222.

적용이 전면화되기에 이른다.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쳐 차차 경제난을 회복하는 과정인 2010년 전후 시기에는 체제수호의 방식으로 선군사상을 강조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과제를 보다 대중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민들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이를 교양화하여 대중에게 계몽될 수 있는 시각장치를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평양 민속공원과 사리원 민속거리 건설 사업이다. 당시 『로동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은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평가하고 있다.¹⁶ 또한, 김정일은 2008년 사리원시 민속거리를 현지지도 한 후 평양 대성산지구에도 민속공원을 건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민속공원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거점의 하나로 훌륭히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적 계몽의 장으로서 민속공원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민속공원 건립은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구호와 연동되어 민족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길 때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도 막아낼 수 없고 종당에는 민족의 존재마저 유지할 수 없다”는 체제유지의 강한 언술임을 드러낸다.¹⁸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래 2010년 무렵까지 20여 년의 기간은 체제수호에 대한 강한 내부적 일체감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화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교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물질문화유산과 연관된 정책의 입안과 실천이 그러한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에 최초로 비물질문화유산의 개념과 보호제도를 포함시키고, 이후 단기간에 많은 비물질문화유산을 등록시키는 과정은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 노선이 정책적으로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명절과 휴식, 의복과 음식을 통해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고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¹⁶ 『로동신문』, 2008.12.12.;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p. 181.

¹⁷ 김현, 위의 책, pp. 186~187.

¹⁸ 박승길,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시며,”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1호 (2011), p. 8.

III.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의 법제화와 정책적 특성

1. 비물질문화유산의 공식화와 진흥 정책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¹⁹에 명기된 비물질문화유산 제도의 정립 이후 북한 당국은 국가등록 제도를 대외적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과 동시에 진행시켰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4년 ‘아리랑’, 2015년에는 ‘김치만들기’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어서 2018년에는 씨름을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시키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성한 국가등록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연관성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가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에 기인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2012년에 아리랑과 김치만들기를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등록했으며, 같은 해 추가적으로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치마저고리 차림풍습을 등록했다. 그리고 다음해 곧바로 평양냉면, 연백농악무, 씨름을 등록하게 되면서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법률이 유적과 유물중심의 문화유산보호체계였다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은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등록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물질문화유산이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실천에 있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부상되어 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군릉을 들 수 있다. 1994년 복원된 단군릉이 북한 역사를 평양중심의 민족주의를 표상하는 장소로 설명한다면, 2016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단군제례’는 의례라는 형식의 제의가 문화유산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⁰ 단군릉과 단군제례는 북한 정권이 1980년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내건 이후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추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군제례가 등록된 해인 2016년에는 ‘사회적 관습과 레식 및 로동생활풍습, 전통의술,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에 해당되는 자료들로 산삼리용기술, 단군제례, 고려인삼재배, 침치료술, 썩떡만들기, 룩두지집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습, 오갈피술양조방법을 비롯해,²¹ 북청사자

¹⁹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을 비롯해 사회적 관습과 레식, 명절행사를 비롯해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등 매우 광범위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unilaw.go.kr>> (검색일: 2019.4.15.).

²⁰ 『뉴스시스』, 2016.7.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5_0014245103&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9.4.15.).

²¹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2016년 제8호 (2016), p. 94.

탈춤, 그네뛰기, 율놀이, 활쏘기, 조선화, 봉산탈춤, 오유혈침치료법'이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²² 2017년에는 '백자 제조술' 등 23개의 대상이 새로 국가 및 지방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고 북한의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다.²³ 이즈음 국가 및 지방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발굴 고증하고 심의 평가하는 사업을 적극화하여 100여 개의 대상을 등록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와 담화 등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행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국제기구와의 교류 사업, 해외 공동연구, 학술토론회 개최 등이 포함하고 있다.²⁵

국가지정으로 등록된 비물질문화유산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는데, 평양랭면을 비롯한 음식문화 관련은 물론, '치마저고리차림 풍습'과 같은 복식, '연백농악무'와 '소년농악무'와 같은 민속놀이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을지문덕 전설', '견우직녀 전설', '금강산 전설'과 '강감찬 전설'과 같은 구비전승 문화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금 제작기술'과 '저대(대금) 제작기술', '장고 제작기술' 등 민속 악기 제작기술과 '누에치기'와 '고려종이 제조기술' 등 전통적인 노동기술과 생업을 비롯해 '고려약물 찜질'과 같은 전통적인 의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²⁶ 이는 남한에서 1962년 이래로 시행된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이 부분별로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실행했음을 의미한다. 그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치마저고리차림 풍습'은 인민들의 일상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꾸준하게 전개된 조선옷입기 정책은 전시회와 품평회를 거쳐 진화되었으며, 일상에서 여성들

²² 저자없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여리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 1호(2016), p. 3.

²³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방송 주요내용, 중앙통신," <<http://nkinfo.unikorea.go.kr/nkp/argument/viewArgument.do>> (검색일: 2019.4.15.).

²⁴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北, 김정은 저작 발표 3주년 관련 성과 선전,"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9.4.15.); 『통일뉴스』, 2017.10.25., <<http://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2559>> (검색일: 2019.4.15.).

²⁵ 『매일경제』, 2014.10.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4/10/1369573/>> (검색일: 2019.4.15.).

²⁶ 『통일신문』, 2017.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99>> (검색일: 2019.4.15.); 『연합뉴스』, 2017.5.19.,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128400014?input=1195m>> (검색일: 2019.4.15.); 『통일뉴스』, 2018.10.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86>> (검색일: 2019.4.15.).

중심으로 외출복과 의례복은 물론, 평상복으로 상당히 확산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옷입기 정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초기에 시행된 사업으로 음식문화와 비교하여 먼저 가시적 효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민족옷”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피복공업 부문의 공장들과 편양복점들의 기술자, 기능공들, 녀맹원들이 만드는 일상 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남,녀 조선옷들과 계절옷 1,100여점이 출품되었다. (중략) 그는(연설자) 모든 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욱 발전시킬뿐 아니라 널리 보급선전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옷차림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

요컨대,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담론은 계급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다가 점점 체제유지에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변모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의 대상과 적용방식은 유일영도체계에서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이어지는 체제유지의 오랜 역사와 같이 호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계급성과 우위를 다투는 민족성의 강조는 김정일 정권부터 가속화되어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평양중심의 역사적 유적이 오래된 민족의 역사를 표상해준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민족으로서의 표상은 비물질문화유산을 통해서 일상의 영역과 서로 만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조선옷과 조선료리의 진흥이 본격화되어 북한 전역의 단위에서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었으며,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공식적인 제도의 시행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음식문화를 통해 본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특성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에 의하면 유적과 유물은 물질유산으로 구분되고 이 외의 것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어 마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 역시 음식과 의복, 생업

²⁷ 저자없음, “제 14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7), p. 29.

기술이나 민속놀이나 공예기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을 수반하고 있어 물질과 비물질을 원천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용어 자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참고했을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관습과 같은 무형의 대상을 기존에 있었던 물질문화 개념과 대비해서 비물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계급을 뛰어넘은 전승문화이지만 상층 문화보다는 민간의 생활문화를 상당 부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소멸하거나 거의 전승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발굴하거나 복원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물질문화는 과거에 국한된 문화의 의미보다는 과거와 연결되는 현재성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북한이 비물질문화유산을 단기간에 발굴하고 진흥한 뒤 등록을 거치는 일사분란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도 현재성에 기초한 변화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중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분야가 음식문화 분야이다.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제도가 시행된 첫 해와 다음 해에 즉시 ‘김치만들기,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평양랭면’이 등록되었다. 이후 관련 북한의 문헌과 관련보도에 의하면 ‘썩떡만들기, 룡두지짐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습, 오갈피술 양조방법, 단군술 양조기술’이 등록되었으며,²⁸ 2017년 1월에는 ‘수정과’, ‘자라요리’, ‘약밥’, ‘신선로’, ‘함경도 단고기장(보신탕)’, ‘함흥 농마(감자녹말)국수’가²⁹ 5월에는 명태매운탕, 송늬이 등록되었다.³⁰ 2018년에는 ‘추어탕’과³¹ ‘고려약 음식요법’, ‘건텅이젓 담그기’, ‘자라내기’³² 등이 추가되어 음식관련 분야가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2015년 이후 지정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는 북한이 2012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한 시기이며, 비물질민족유산의 세부 구분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구분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등³³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시기라고

²⁸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2016년 8호 (2016), p. 94.

²⁹ 『통일신문』, 2017.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86>> (검색일: 2019.4.15.).

³⁰ 『연합뉴스』, 2017.5.19.,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128400014?input=1195m>> (검색일: 2019.4.15.).

³¹ 리광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 『조선여성』, 2018년 제10호 (2018), p. 55.

³² 『통일뉴스』, 2018.10.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86>> (검색일: 2019.4.15.).

³³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p. 384.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음식문화의 비물질문화유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던 기반은 전문 식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음식에 대한 발굴과 진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리경연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메뉴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연대회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민족음식전시회’이다. 이 대회는 인민봉사총국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각 도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150여개 단위의 요리사 600여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대규모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선보인 음식들로는 ‘평양랭면, 고기쟁반국수, 함흥농마국수, 신선로, 전골, 룡두지짐, 룡정어생각즙, 자라탕, 차돌메기회, 잉어청주찜, 넙치회국수, 타조불고기, 왕개구리구이, 소갈비국, 단고기국, 추어탕, 백김치’ 등 인데³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된 메뉴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진흥정책은 다음과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굴의 대상이었던 ‘민족음식’, ‘토배기료리’의 계발과 연계되어 있다.

민속료리를 발전시키는 데서 도별로 자기 지방 토배기료리의 특성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토배기료리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자면 해당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늙은이들을 적극 계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민속음식들을 우리 대에 빠짐없이 찾아내고 시대적 요구와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게 하여야 합니다.³⁵

위와 같이, 민족음식 발굴사업은 2000년대 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행된 ‘지방 토배기 료리’ 발굴사업을 통해 진행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거쳐 비물질문화유산화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한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적인 예능이나 기술을 비롯해 공동체적 신앙 등이 먼저 지정되었던 현상과 다른 방식으로 음식이 비물질문화유산제도의 진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추론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남한과 비교하여 덜 산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민속의 배경이 되는 촌락공동체가 집단농장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면서 각 마을마다 있었던 공동체적

³⁴ 허상봉, “민족료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 『조선료리』, 2016년 제1호 (2016), pp. 8~9.

³⁵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p. 237~244.

의례나 두레, 그에 동반되는 풍물을 비롯해 다양한 생업기술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탈춤이나 연희, 민속놀이 또한 북한 정권의 노선과 문화예술정책에 맞게 조정되면서 전승기반이 상실되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인 일제시기에만 해도 단오와 같은 세시풍속이 지역마다 매우 왕성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주도했던 지역단체나 시장의 상인회 등이 역시 소멸되면서³⁶ 자연스러운 전승은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음식문화는 사회주의 문화에서 배척할만한 계급적 의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인민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과 겹치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강한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어가는 추세였다. 이 과정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식재료와 조리방법을 통한 먹거리 문화의 강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뿐만 아니라 기근에 처한 인민의 식량위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조선여성』과 같은 잡지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살림을 깐지게 해야 한다’ 든가 남새나 산나물을 장려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³⁷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갖가지 나물을 리용한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적은 쌀을 가지고 썩을 넣어 만든 썩떡은 식생활을 분한있게 또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음식이다.…우리여성들은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옛선조들이 창조한 민족음식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책임성과 역할을 다 하자.³⁸

어려운 경제적 위기 시대에 민족음식에 대한 강조³⁹는 선군시대로 그대로 이행되어 민족음식을 발전시켜 전문화와 표준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⁴⁰ 나아가 선군시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⁴¹ 이를 진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³⁶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62호 (2015), p. 163.

³⁷ 본사기자, “여성들은 식생활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자,” 『조선여성』, 2015년 제12호 (2015), p. 54.

³⁸ 김희숙,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나물의 리용,” 『조선여성』, 2008년 제8호 (2008), p. 53.

³⁹ 전금선,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근로자』, 2005년 제2호 (2005), pp. 53~56.

⁴⁰ 한현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 민족음식발전을 위한 요리가공의 전문화, 과학화, 표준화, 현대화를 위한 투쟁,” 『력사과학』, 2007년 2호 (2007), p. 29.

⁴¹ 본사기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키자,” 『조선여성』 2015년 제10호 (2015), p. 54.

정책으로는, 민족음식의 발굴과 발전은 물론 이를 인민들의 생활에 적용시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가령, 3.8 국제부녀절이나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을 비롯해 여러 민족명절들을 계기로 “민족음식평의회를 조직하고 녀맹원들이 민족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교육하고, 나아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도 즐겨 먹도록 해야한다”라고⁴² 강조하고 있다. 곧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다.⁴³

물론 이 과정에는 탐다운 방식의 제도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게 되는데, 조선료리협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료리협회는 1990년 『조선료리』라는 잡지를 창간한 이후 다양한 요리관련 서적들을 발간했는데, 1994년에는 『조선료리전집』을 출간하여 2013년에 10권 전권을 완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료리협회는 전국민족음식전시회를 주최하여 평양의 중앙기관은 물론 각 도 단위의 대표 식당의 경연대회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민족료리’를 선발하고 이를 비물질문화유산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발굴과 진흥과정에서 북한의 지역음식은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역으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되는 창출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김정은 시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실천에서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산에 음식문화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과 기예 중심의 전승적 기반이 미약한 현실에서 ‘민족료리’는 발굴과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실천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활성화는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⁴⁴라는 체제결속의 당면과제와 연결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우월 곧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 사회주의를 지지해주는 사상으로 정교화 되고 있으며, 현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정치적 담론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⁴² 본사기자,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녀성』 2014년 제10호 (2014), p. 52.

⁴³ 박운심,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녀성』 2011년 제2호 (2011), p. 52.

⁴⁴ 박승길,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시며,”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1호 (2011), p. 8.

IV.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책화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시대적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로 표상되는 민족성을 전면화시키는 통치체제의 전환과정이 전통문화의 재창출과 일관성 있는 문화유산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법률로 제도화되면서 비물질문화유산을 체제유지에 호응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갔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문화유산법이 2015년에 민족유산법으로 개칭되어 문화유산의 민족적 의미를 강화시킨 것은 물론, 2018년 들어서는 기금을 만들어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설립을 통해 ‘국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외동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 개별적 인사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유적과 유물, 비물질 유산의 발굴과 고증,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존’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특히 대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의 확장에 역사유적이 추가되기는 힘든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리한 비물질문화유산은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동향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 역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북한체제가 노정해온 지배담론으로서 계급과 민족의 경합이 균형화되었다는 점이다. 정권 수립 이후 대내외적 정치 질서에 따라 많은 변곡점을 지나오면서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로서 계급과 민족은 북한 체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온 동인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의 보편적 이념하에 민족적 특수성은 항상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가 국내와 국제적인 정치적 파동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의 퇴조 속에서 등장하여 30여 년 한 세대에 이르는 시간동안 지속시키고 있다. 여기서 30여 년의 시간은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사업이라는 대중적 확산에 상당한 시간적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명절의 조상의례를 비롯해 조선옷입기와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비롯해 의식주 전반에 걸쳐 북한 주민의 전 세대에서 중요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⁴⁵ 『연합뉴스』, 2018.7.12.,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2156000014?input=1195m>> (검색일: 2019.4.15.).

중요한 점은 정책 행위와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 정책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당중앙과 관련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체계와 함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행위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 사람들이 형성해온 문화 그 자체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음식분야 등록사업이 당중앙과 조선료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 단위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한 음식이 실제 주민들의 음식문화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음식문화와는 어떠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음식들은 지역의 토배기 음식을 계발시켜 민족음식화하는 창출을 거쳐 왔지만,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제 속에서 북한 주민이 만들어낸 음식문화는 두부밥과 같은 길거리 음식의 등장과 음식소비의 시장화 현상일 것이다.⁴⁶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보루로 확고해지고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의식주와 명절문화, 가정의례 등과 같은 주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갈지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물질문화유산 정책 또한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되는지를 심도있게 천착해봐야 할 것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3일

⁴⁶ 김수경, “북한이 식량난 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94.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법 민족연합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대화』.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91.
-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김 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서울: 푸른숲, 1989.
-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2. 논문

-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 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62호, 2015.
- 김수경. 『북한이 식량난 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종근. “북한의 민속전통 계승의 실제와 의미.” 『동방학』. 제22집, 2012.
-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 신현옥·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속학』. 제41집, 2014.
-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2017.
-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
- _____.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 정철현.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37집 제2호, 2006.
- 지병목.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권, 2003.

3. 북한 자료

- 김광진. “백두산 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3년 2호, 2003.
-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2016년 8호, 2016.
- 김희숙.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나물의 리용.” 『조선녀성』. 2008년 제8호, 2008.
-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6년 제3호, 2006.
- 리광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 『조선녀성』. 2018년 제10호, 2018.

- 박승길.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시며.”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1호, 2011.
- 박윤심.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여성』. 2011년 제2호, 2011.
- 본사기자. “여성들은 식생활을 알뜰하고 간지게 하자.” 『조선여성』. 2015년 제12호, 2015.
- 본사기자. “민속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7년 4호, 2007.
- 본사기자.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여성』. 2014년 제10호, 2014.
- 본사기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키자.” 『조선여성』. 2015년 제 10호, 2015.
-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명절행사.” 『고고민속론문집』. 1973년 5집, 1973.
- 저자없음. “인민들이 즐겨찾는다-모란봉구역종합식당 강냉이전문식당에서.”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7.
- 저자없음. “제 14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7.
- 저자없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여리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여 발양시켜나가자.”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1호, 2016.
- 전금선.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근로자』. 2005년 제2호, 2005.
- 한현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 민족음식발전을 위한 료리가공의 전문화, 과학화, 표준화, 현대화를 위한 투쟁.” 『력사과학』. 2007년 2호, 2007.
- 허상봉. “민족요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 『조선료리』. 2016년 제1호, 2016.
- 홍기문.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조선문학』. 1971년 제5호, 1971.

4. 신문

- 『뉴시스』.
- 『로동신문』.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통일뉴스』.
- 『통일신문』.

5. 인터넷자료

-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http://unilaw.go.kr>>.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Policy in North Korea

Kwon Hyeokhui

North Korea's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has tended to be focused on historical sites, but it has recently expanded to include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since North Korea's Nationalism (joseonminjokjeiljuui) became an important ruling ideology in the 1980s, promotion policies such as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holidays were widespread, and in 2012, the North Korea government created laws related to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biggest features of North Korea'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is that it is surging in areas related to food culture. This trend of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policies requires deeper attention in that it reflects the life-culture of North Koreans, along with understanding a facet of the ideology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the study of North Korea'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should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a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itself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transmitting, along with analyzing of policy actions at the upper level.

Key Word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olicy, Joseonminjokjeiljuui, Food Culture, 'March of Suffering',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